

# 韓경제 코로나 충격 딛고 활력 찾는다...선도 경제 대전환 '원년'

### 정부, '2021 경제정책방향' ...올해 -1.1% 역성장 내년 불확실성 속 '방역+경제' 균형...3.2% 성장 558조 '초슈퍼예산' 63% 상반기 집행...역대 최고

한국 경제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2년 만에 역성장(-1.1%)의 늪에 빠졌다. 정부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여전히 떠안은 상황에서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활력을 되찾는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큰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다.

내년에는 올해 역성장에서 벗어나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전방위적 활력 제고 노력 등의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개선과 일자리 정책 효과가 나타나며 취업자수도 15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기대감 속에 서서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날 것인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최근의 3차 확산세를 보면 불확실성에 따른 제약 요인이 상존한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도 개선 흐름을 보이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은 여전히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고용 회복 속도도 더뎠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가속도가 붙은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어려움 속에 양극화는 심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해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침체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내년도 경제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세계경제는 여러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의 개선흐름을 전망하고, 포스트 코로나 구조 변화도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코로나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 반복되는 잠재성장을 둔화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 회복을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558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 중 63%를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6개월 내에 쏟을 예정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른 시간 내 정상 회복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역성장의 배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이 첫 손에 꼽히는 만큼 내수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마련했다.

내년에 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 별도 추가 소득공제 한다. 내년 상반기 중 승용차 개소세도 6개월 연장해서 30%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에 대해 500만원 규모로 환급도 이뤄진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의 배달앱 등 온라인 사용을 활성화하고, 내년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선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반등을 위해 추진한 공공·민자·기업 등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내년에는 규모를 110조원으로 확대해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한다.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최대 75%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초기 투자 시 세금 부담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안전보고를 하고 있다.

줄여준다.

공장 자동화설비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세감면율도 중소기업은 기존 50%에서 70%까지, 중견기업은 30%에서 50%까지 확대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첨단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추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규모를 늘려 대기업 1인당 400만원, 중소기업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받았던 기업은 올해 채용이 줄었어도 계속 혜택이 주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를 피할 수 없었던 탓에 내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총 104만개 직·제일자리 중 절반인 50만개를 1월에 모집한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의 70%를 3분기까지 채용하며,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올해 2만5700명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

해 올해 연말로 끝나는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내년 1~3월분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도 내년까지 연장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백신에 의해 코로나 방역이 완전 통제될 때까지 '방역이 곧 백신'이자 회복의 대전제"라며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조속히 진정시키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정기자

## 내년부터 전기요금에 유가 반영...상반기 1조 인하 효과

### 산업부·한전, 전기요금 개편안 확정...전기위 심의 거쳐 청구서에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1분기 kWh당 3원↓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 청구서 예시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 기준	
개편 전	개편 후
기본요금 1,600	기본요금 1,600
전력요금 46,845	전력요금 ①+② 45,095
	① 개편 전 요금 46,845
	② 환경비용 차감 -1,750
	기후환경요금 1,855
	연료비 조정액 -1,050
전기요금 계 48,445	전기요금 계 48,445
부가가치세 4,845	부가가치세 4,845
전력기금 1,790	전력기금 1,790
당월요금계 55,080	당월요금계 55,080
청구 합계 55,080	청구 합계 54,000

전력요금: 기후·환경 비용의 일부(RPS, 4.5원/kWh / ETS, 0.5원/kWh) 분리  
 기후·환경요금: 신재생에너지 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감축비용(ETS, 0.5원/kWh), 미세먼지 저감 위한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kWh)  
 연료비 조정액: 관세형 고시 무역통계에 따른 연료비(LNG, 석탄, 유류) 변동 반영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한국전력이 석유, 액화 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을 전기요금에 3개월마다 반영한다. 최근 유가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만 1조원가량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전기요금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를 완료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혔던 것처럼 원가 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가격 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 조정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편 전기요금 체계에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했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반동분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뺀 값이다. 연료비는 관세형에서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게 된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된다는 뜻이다.

김미희기자

산업부는 내년 1분기에는 kWh당 3원, 2분기에는 5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주택용에 적용하면 1분기와 2분기 전기요금이 각각 1050원, 1750원(월 350kWh 기준)씩 줄어들게 된다. 같은 기간 산업·일반용은 2만8000원, 4만6000원(월 9.2MWh 기준)을 덜 낼 수 있다.

내년 하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앞으로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주요 기업의 유가 전망 상승 폭이 내년에도 크지 않기 때문이 인하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 중후반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했다.

반대로 유가가 상승하면 연료비 조정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조정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인상·인하되지 않는다.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 사용 요금(350kWh, 5만5000원)을 예로 들면 최대 1050원까지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산업·일반용의 경우 2만8000원(9240kWh, 119만원)이 최대 변동치다.

분기별 변동 폭이 kWh당 1원 안쪽이면 요금은 조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 신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합리적 전기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 전남도, 김 글로벌 식품화 추진...수출 수산물 최대 효과

### 2024년까지 3억 달러 목표 가공기술·위생관리 등 추진

전남도는 김 수출 3억 달러를 열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2276억원을 투입, 김을 글로벌 식품으로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은 전남지역 수출 수산물의 최대 효자품목으로, 지난해 전남지역 수산물 총 수출액 2억6000만 달러의 56%인 1억4500만 달러를 차지했다.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늘리고 '식품업계의 반도체'로 불리기도 한다.

전남도는 전남 김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김 수출 3억 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수출형 김 가공 기술과 제품 개발, 김 품질 및 위생관리 강

화, 수출시장 확대, 연구기반 확충 등 18개 사업으로 구성해 총 2276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김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최근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정부 투자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김 수출 3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사업비로 100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출형 김 가공 기술 및 제품 개발(14억원), 시범 검사장 구축(46억원), 가공시설 에너지 절감 장비 및 정수시설 보급(25억원), 가공설비 지원(13억원) 등을 추진한다.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사업으로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1089억원), 마른김 검사장 구축(300억원), 김 품질 및 위생관리 장비

보급(100억원), 김 스마트 가공시설 구축(100억원) 등이 있다.

김 산업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국립 김 산업연구소 설립(300억원), 김 산업특구 지정 지원(200억원) 등을 추진기로 했다.

전남도는 김 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제품 다양화와 경영비 부담 완화, 생산시설 위생환경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고, 김 산업 연구기능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지역 김 원물 생산량은 연간 60만톤으로 전국의 78%를 차지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해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오는 2024년까지 김 수출액 3억 달러 달성을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위기감 커지는 쌍용차, 자칫 '남떠러지'

### 14일 외국계은행 대출 600억 연체...21일엔 산업은행 900억 만기도래

쌍용자동차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외국계 은행 차입금 600억원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2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원 만기가 도래한다.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150억 대출 만기도 이달 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분기 연속 감사의견 거절에 당한데 이어 올해 4분기마저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돼 위기감은 더욱 크다.

대주주 인도 마힌드라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의 미상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겠다고 공시했고, 산은이 대출상환을 연기에 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600억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쌍용차가 연체한 금액은 이차 포함 JP모터 약 200억2000만원, BNP파리바 100억100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300억3000만원 등이다.

쌍용차는 "경영상황 악화로 상당 자금이 부족하다"며 해당 대출기관과 만기 연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출원금은 약 599억원, 이자는 약 6177만원이다. 쌍용차 자기자본의 약 8.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이와 관련, 인도 증권거래소에 "해당 대출의 미상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마힌드라 그룹이 이를 책임진다"고 공시했다. 마힌드라그룹은 쌍용차가 외국계은행들과 대출계약을 맺을 때 지급 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쌍용차 경영권 매각협상을 진행 중인 마힌드라가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계 은행을 직접 설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 차입금 해소 여부는 21일로 다가온 산업은행 대출금 900억원의 만기 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은은 지난 9월 900억원 만기를 한 차례 연장하며 대주주 마힌

드라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최대한 산은 부형장은 당시 "쌍용차에 지원하려면 책임주체가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책임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쌍용차가 외국계 차입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국제은행인 산은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산은마저 대출금을 거둬들일 경우 쌍용차의 법정관리행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쌍용차가 무너질 경우 고용과 지역경제, 부품산업 등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다만 쌍용차의 지난달 월 판매도 1만1000대를 돌파하는 등 판매가 순항하고 있고, 마힌드라가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쌍용차가 돌아오기를 찾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